

사회

인권도시 광주 “글썸 올시다..”

쌍촌동 주민들 “집값 떨어진다” 장애인 보호시설 신축 반발



1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보건소 옥상 텃밭 상추 수확 옥상 텃밭에서 중흥어린이집 선생님과 원생들이 그동안 북구청 직원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기른 상추와 고추 등을 수확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허위출장비 빼돌려 군수에 뇌물

임실군수·공무원 등 9명 입건

4년간 1억3000만원

민선 전·현직 군수 4명이 모두 비리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임실군이 또 한 번 비리 사건에 휘말렸다. 임실경찰은 출장명령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출장비를 빼돌려 전·현직 군수에게 뇌물 등으로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뇌물 공여 등)로 전 임실군 예산계장 A(58·5급)씨와 B(51·6급)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

사행성 게임기 불법 개조

10억 부당이득 2명 구속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지검과 합동수사를 통해 18일 성인용 사행성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공급업체 대표 전모(38)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권도시’ 광주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사업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건물 신축을 고대하며 노후한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공사가 늦춰지면서 큰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18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S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S시설) 측이 지난 4월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주택가 인근에 연면적 667㎡(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허가 요청서를 구에 제출했다. S시설 측은 신축 건물 1층에 15명 정도의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2~3층에는 자활이 가능한 지적장애인 8명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을 배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구는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공사허가서를 내주지 못하고 있다. 구청이 나서 수차례 중재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서다. 신축을 서둘렀던 S시설 측은 현재 이고 언제 공사를 시작해야 할 지 기약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이미 건물 부지를 몰래하고 관계법령을 해석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1년의 시간을 보낸 터다. 시설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녀 교육환경이 나빠진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지적장애인은 위협하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 S시설 측은 “주민문화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병행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등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지경이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우리가 직접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겠다”라는 절충안까지 내놓으며, 반대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서구청은 주민들이 다음달 10일까지 현 부지와 같은 조건의 대체부지를 발급해줄 방침이다. S시설 대표는 “주민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주민들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지만, 주민들이

수용할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물신축이 원만하게 추진돼 주민들과 시설 이용객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웃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이정강 소장은 “장애인들이 대한 편견이 여전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인권도시’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돈놀이 경찰’ 여성 참고인 성폭행도

중학생 투신 사망 과외 여교사에 7000만원 뜯어

고려 사재를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본보 7월 18일자 6면)이 여성 참고인을 협박해 성폭행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수경찰은 18일 불법 사채업을 하면서 수천만원을 챙기고 경찰 직분을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독지폭행 등)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박모(47) 경위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08년

3월 초 여수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발생한 중학생 A(당시 16살)군 자살사건의 참고인이었던 B(여·41)씨에게 접근해, “밀어서 숨지게 한 게 아니냐”며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박 경위는 B씨의 과외 공부방 학생이었던 A군이 학습 장소로 사용하던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한 다음날 B씨를 불러내 “증거수집 차 공부방 컴퓨터를 압수해야 한다”며 B씨를 공부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또 2009년 3월께 불법 사채업자 최모(40·구속)씨에게 1억5000만원을 투자해 이자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 경위가 불법 사채업자 최씨에게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의 이자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갈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남경찰은 이와 함께 이 사건과 관련 워선 개인과 상남 여부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박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114 안내 고의 장난전화 3번 ‘고발’

Ktis ‘악성 고객 30아웃’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 악성 장난전화를 세번이상 걸면 고소 또는 고발당할 수 있다.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운영하는 Ktis는 상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질적인 악성 고객에게 법적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는 ‘악성 고객 30아웃’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14 안내 상담원에게 언어 폭력, 성희롱, 협박 등의 악성 장난전화를 걸면 두차례 경고를 한 뒤, 세차례 경고 때는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참여자치 21 ‘광주 CCTV 입찰’ 진정

거론된 기관장 ‘명예훼손’ 고소

광주시의 총인적감시시설 관련 비리를 경찰에 고발했던 지역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40여명대 CC(폐쇄회로)TV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입찰과 관련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진정서에 언급된 광주시 산하기관장이 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지검은 18일 최근 참여자치 21이 CCTV 사업 입찰과 관련 비리 가능성이 높다는 광주시 산하 기관장 A씨와 관련 공무원 5명, 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검찰 재출석 조사 받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의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한 조사차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장 도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부풀려 출마자들이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았는지 여부를 받고 있는 CNC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종민기자 ejkim@

성형수술까지 하며 시기 행각

성남시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성형수술까지 해가며 자살가로 속이고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대의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18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박모(51)씨는 부산에서 500여대 회사를 소유한 기업가 행세를 하며 50대 독딸래금 컨소시엄을 CCTV 통합관리센터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하자 무효한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8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한편 광주시 모 산하기관장은 이날 “참여자치 21이 제보를 위주로 작성한 진정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살됐다”며 이 단체 대표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비고. Includes details for various properties like apartments and land.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비고. Includes details for various properties like land and buildings.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1. 농지매각 농지특정지역명 등 제출해야 하는 최고거래상인권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특정지역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2012. 8. 2.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2. 8. 9. [월] 18: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방법원 입찰방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장에 비치된 기입양식(매각 신청서, 입찰서의 양식, 주 소, 입찰보증, 보증금 등) 기재하고 납입하여 방장에게 제출하여 입찰보증금 및 입찰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매수신청의 양식은 최저매각가격의 1%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발행된 자기인수표 또는 현금 등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취약계약을 체결한 [일일]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2인 이상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확인서와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투입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 표시하지 않고 입찰을 신청한 사람은 최고거래상인권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⑤ 최고거래상인권과 차순위매수상인권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매각결정일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일까지 확정되고 대금지급까지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이 확정된 후 매각결정일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매각결정일 이후 3일 이내에 매수인 매각대금 및 지대금, 배분금 납부하면 대금지급이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 납부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보증금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유된다. ② 소유권이전과 인도 지연이나 기입보증금 및 배분금 지급을 위해서는 매수인의 자발적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③ 매각대금 납부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보증금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유된다. ④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보증금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유된다. ⑤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보증금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유된다. ⑥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보증금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유된다. ⑦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보증금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유된다. ⑧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보증금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유된다. ⑨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보증금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유된다. ⑩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보증금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유된다.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영복